

코로나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정민현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민지영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차 례

1. 국제 원유가격 하락과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
2. 소비·투자 둔화 현황 및 원인
3. 정부의 대응방안
4. 시사점

주요 내용

- ▶ **[코로나19와 러시아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원유 수요 급감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2014년 이후 경제성장 둔화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OPEC 원유 감산 합의가 결정되면서 러시아의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순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 문제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2020년 대규모 정부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원유가격 하락세로 인해 정부 재정의 주수입원인 원유 판매수익이 저조할 경우 정부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 **[성장 둔화의 원인 및 대응책]** 2019년의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는 주로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주요 대응책은 다음과 같음.
 - **[단기: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위축된 민간 소비·투자를 보전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
 - 러시아 통화당국은 지난 2월 7일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하여 2019년 이후 총 6회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 당국은 2020년 정부지출을 지난해 대비 7%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중·장기: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에 의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상호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고리(negative spiral)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공급측면에서 구조적인 투자촉진 방안에 방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크게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 및 수출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SME) 지원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 ▶ **[시사점]**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가격 하락 및 러시아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상존하는 여러 위험요인으로 2020년 상반기에 민간 소비·투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중·장기 대응책과 관련한 2019~24년 정부의 예산지출 편성을 보면, 디지털 산업 발전 및 인적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한·러 디지털 협력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의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1. 국제 원유가격 하락과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

그림 1.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랄산 원유가격 추이



자료: NESTE 원유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0. 3. 10).

■ [2019년 성장을 둔화의 배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원유 수요 급감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세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2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바이러스의 지구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¹⁾가 점증하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이 최근 급락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2020년 1월 중순까지 배럴당 60 달러 이상을 유지하던 우랄산 원유가격은 2020년 3월 10일 현재 배럴당 약 48 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임.
- 글로벌 원유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OPEC 원유 감산 합의가 결정되면서 러시아의 주요 수출 자원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²⁾
- 코로나19 확산 및 세계 경기둔화 지속으로 인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와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하락할 경우 순수출이 감소하여 성장률에 더욱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부예산에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지출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원유와 천연자원 생산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러시아 정부 수입의 절반(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수출은 전체 상품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음.³⁾
-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제유가 10달러 하락 시, 순수출 감소 및 국내소비의 위축으로 러시아 GDP가 0.7%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지출안은 우랄산 원유가격이 배럴당 42.40 달러일 경우를 가정하고 입안되므로, 배럴당 42.40 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지출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 OECD(2019. 3. 2),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2) OILPRICE(2019. 3. 9), "Standard Chartered Slashes WTI Oil Price Forecast To \$32,"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Standard-Chartered-Slashes-WTI-Oil-Price-Forecast-To-32.html>(검색일: 2019. 3. 10).

3) 박정호, 김석환, 정민현(2019),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개통의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9-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음.⁴⁾

2. 소비·투자 둔화 현황 및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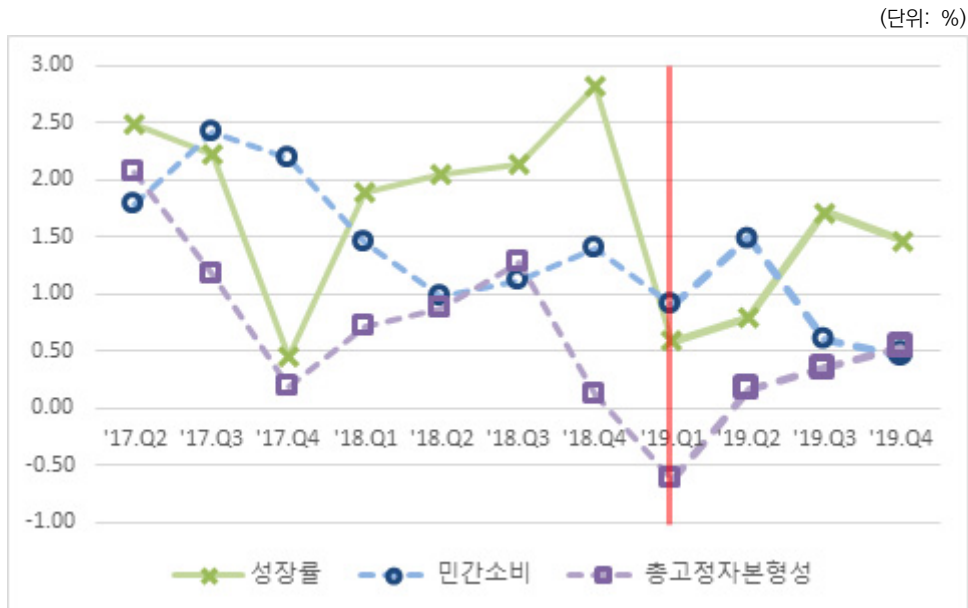
표 1.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투자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

구분	'18.Q1	'18.Q2	'18.Q3	'18.Q4	'19.Q1	'19.Q2	'19.Q3	'19.Q4
경제성장률	1.89	2.05	2.14	2.82	0.59	0.80	1.72	1.48
민간소비 성장기여도	1.44	0.98	1.11	1.40	0.91	1.49	0.61	0.47
총고정자본형성 성장기여도	0.71	0.87	1.27	0.12	-0.63	0.17	0.35	0.53

자료: 러시아 통계청, IHS Markit(검색일: 2020. 2. 20).

그림 2.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투자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러시아 통계청, IHS Market(검색일: 2020.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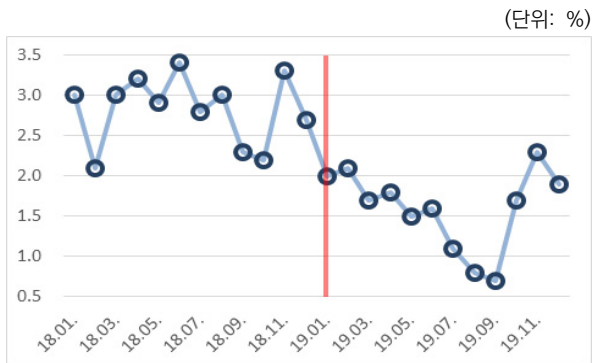
- [2019년 경제성장률 둔화의 배경] 2019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저조한 성장률은 주로 민간 소비·투자 둔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표 1 참고).
- 2019년 들어 성장률 추세와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 추세가 2018년보다 현저히 낮아짐(그림 2 참고).
- 특히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2018년 4/4분기부터 눈에 띄게 낮아진 가운데, 2019년 1/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4) OECD, op. cit.

- 2019년 3/4·4/4분기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전 분기 0.51%에서 각각 2.24%, 1.69%로 크게 높아지면 서 동일 분기 성장률이 다소 상승하였지만,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여전히 2018년 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였음.
- 실제로 민간소비 추이를 대변하는 소매거래 증가율이 2019년 1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가운데(그림 3.1 참고) 2019년 9월에는 0.7%를 기록, 2017년 4월 0.3%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설 비투자 증가율 추세 역시 2018년 3/4분기 이후 눈에 띄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그림 3.2 참고).
-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19년 9월에 발표한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 『2024년 러시아 연방 경제발전 전 망』⁵⁾ 역시 2019년 상반기의 저조한 성장률을 주로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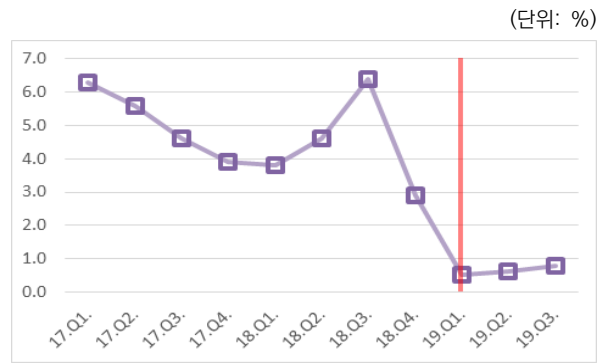
그림 3. 소매거래 및 설비투자 추이

그림 3.1. 소매거래 증가율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0. 2. 20).

그림 3.2. 설비투자 증가율



자료: 러시아 통계청.

■ [소비 위축 원인] 최근의 소비 위축 원인으로 실질임금 상승률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를 지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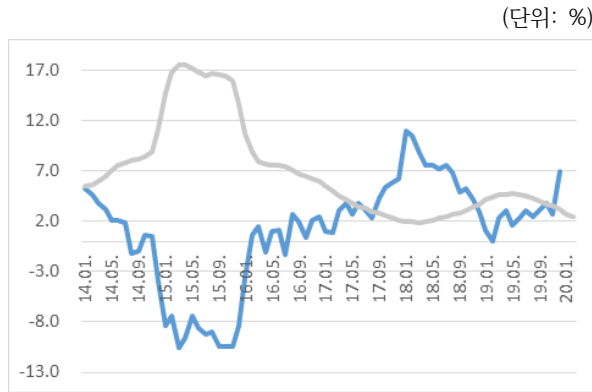
-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8년 1월 11%에서 2019년 2월 0%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하락 추이를 보였으며, 2019년 3월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2018년의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그림 4.1 참고).
- 일반적으로 실질임금과 인플레이션은 그림 4.에서와 같이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그림 4.2에서 보여지 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 동안 실질임금 증가율의 추세적 하락은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상승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⁶⁾

5) 러시아 경제개발부,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 2019.

6)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으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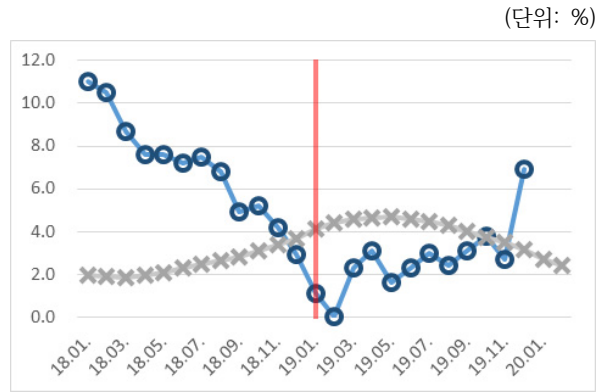
그림 4.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그림 4.1 2014~20년



주: 회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은 각각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나타냄.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0. 2. 20).

그림 4.2 2018~20년



주: 회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은 각각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나타냄.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0. 2. 20).

- 실질임금 증가율이 저조하여 가계소득 증가세가 주춤 가운데 2018년 이후 소득 및 소비 대비 민간부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소비를 제약하였으며, 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중 역시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함(그림 5 참고).
 - 소득 대비 민간부채 비중은 2018년 24.7%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4년의 24.5%를 이미 상회하였으며, 2019년에는 28.4%로 더욱 크게 증가함.
 - 소비 대비 민간부채 비중 역시 2019년 47.57%를 기록,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4년의 43.29%를 상회함.
 - 2018년 이후 민간부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17년 평균 52.70%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49.46%, 50.29%로 낮아짐.
 - 러시아의 GDP 대비 가계대출은 2018년 기준 약 1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해마다 연체 채무자(overdue debtors)가 3~4%씩 증가하고 있으며⁸⁾ 2019년 1분기 신규 차입자의 30% 이상이 수입의 절반을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계대출 급증 및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일정 부채비율 이상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 감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발급기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따라 가계대출 제약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민간소비가 획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중은행은 1만 루블 이상의 대출 건 전체에 대해 채무자의 부채비율(월 소득을 월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을 의무적으로 계산·관리하는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⁹⁾
 - 이와 동시에 부실은행 통폐합을 계속하여 2014년 1월 923개 달했던 대출기관(credit institutions)을 2019년 11월 444개까지 줄였으며, 앞으로 300여 개까지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7) Bank of Russia(2019), *Analysis of Consumer Lending Trends in 2015-2019 Based on Credit History Bureau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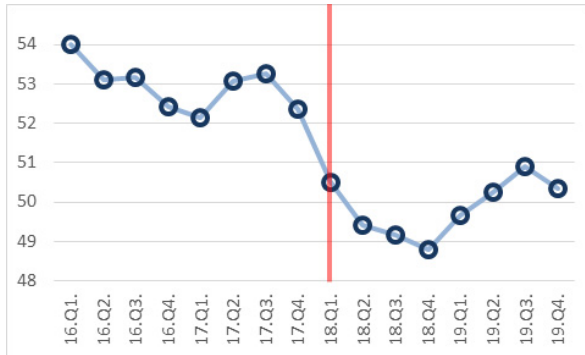
8) *Ibid.*, p. 3.

9) 러시아 중앙은행 보도자료(2019. 10. 1), "Legal changes effective from 1 October 2019," <http://www.cbr.ru/eng/press/event/?id=3914>(검색일: 2020. 2. 20).

그림 5. 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중 및 소득·소비 대비 민간부채 비중 추이

그림 5.1. 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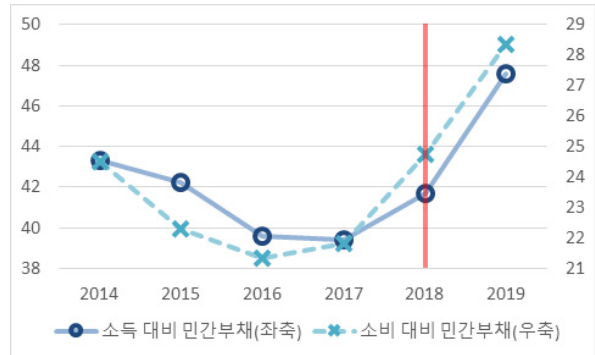
(단위: %)



주: 위의 시계열은 민간소비를 GDP로 나눈 값임.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0. 2. 20).

그림 5.2. 소득·소비 대비 민간부채 비중

(단위: %)



주: 위의 '소득 대비 민간부채' 시계열은 민간부채(NPISH 부채 포함)를 개인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소비 대비 민간부채' 시계열은 민간부채(NPISH 부채 포함)를 개인소비(NPISH 소비 포함)로 나눈 값임.
자료: 러시아 통계청, IHS Markit(검색일: 2020.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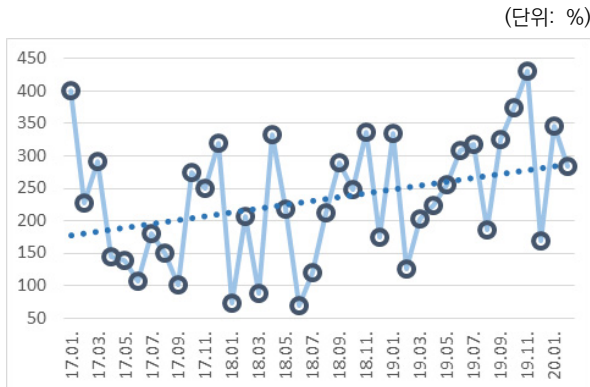
■ [투자 위축 원인] 생산성 향상 둔화에 의한 투자수익률 하락 및 대러 경제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기피 심리를 지목할 수 있음.

-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를 대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경제 및 정책 불확실성 지표(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음(그림 6.1 참고).
 - 해당 지표는 Scott Baker, Nicholas Bloom, 그리고 Steven J. Davis에 의해 개발된 지표로, 한 국가의 유력 일간지(러시아의 경우 Kommersant)에 '불확실한(uncertain)', '불확실성(uncertainty)'의 단어가 '경제(economy)', '경제의(economic)' 등의 용어 또는 '정책(policy)', '세금(tax)', '지출(spending)', '규제(regulation)', '중앙은행(central bank)', '법(law)' 등의 용어와 함께 등장한 경우를 모두 합한 수치임.
- 한편 생산자 PMI(구매관리자 지수)는 2019년 3월 52.8을 기록한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5월 이후 계속해서 50.0 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6.2 참고).
- 또한 2014년 대러 경제제재 이후 환율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었는데,¹⁰⁾ 환율 및 주요 수출원자재의 국제가격에 매우 민감한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러 경제제재로 인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보고서 역시 생산성 개선 둔화 및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실제 투자 수준이 '최적투자수준(optimal level of investment)'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이 25%가 되는 것을 최적투자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표 2 참고), 2018년 이후 해당 비중은 20~22% 선에 그치고 있음.

10) 정민현(2019),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 변화와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19-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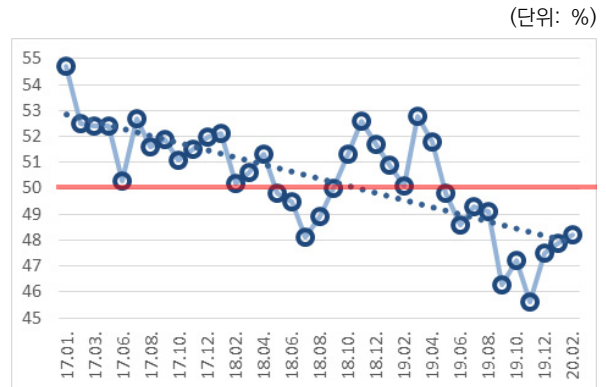
그림 6. 불확실성 지표 및 제조업 PMI 추이

그림 6.1. 불확실성 지표



주: 파란색 점선은 선형 추세를 나타냄.
자료: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검색일: 2020. 2. 20).

그림 6.2. 제조업 PMI



주: 위의 시계열은 계절 조정이 되었으며 파란색 점선은 선형 추세를 나타냄.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0. 3. 10).

3. 러시아 정부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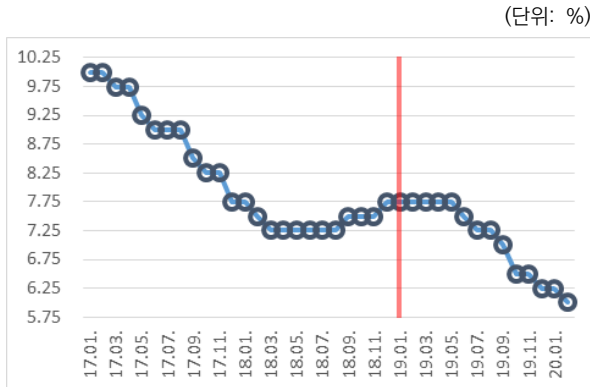
■ [단기: 총수요 진작] 러시아 정부는 민간 소비·투자 저조로 인한 성장률 둔화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금융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 들어 한동안 7.2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민간수요 진작을 위해 2019년 한 해에만 5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2020년 2월 7일 6.25%에서 6.00%로 한 차례 더 금리인하를 단행함(그림 7.1 참고).
- 2019년 이후 계속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안정된 추세를 보여, 총수요 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큼.
 -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에 머물러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4.0%를 하회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물가상승률이 2.7%에 그쳐¹¹⁾ 단기적으로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 2019년 1월 부가가치세(18% → 20%) 인상으로 2019년 초 물가상승률이 5%대로 상승하는 등(그림 4.2 참고), 소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4%대로 안정되는 한편 소비·투자 둔화문제가 심화되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음.

11) 러시아 중앙은행 보도자료(2019. 2. 7), "The Bank of Russia cuts the key rate by 25 bp to 6.00% p.a.," <https://www.cbr.ru/eng/press/keypr/> (검색일: 2020.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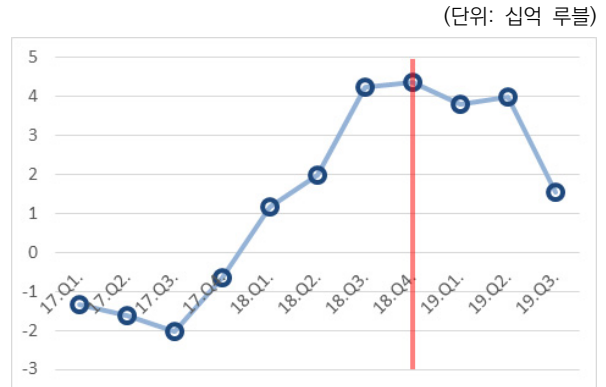
그림 7. 러시아의 기준금리 및 정부지출 추이

그림 7.1. 기준금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0. 2. 20).

그림 7.2. 정부 재정수지



자료: 러시아 재무부(검색일: 2019. 12. 2).

- 정부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흑자 폭을 꾸준히 늘려나가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 여력(fiscal space)이 크게 호전된 상황임(그림 7.2 참고).
- o 2018년 정부 흑자는 GDP의 약 3%에 달했으며, 2019년 역시 정부 흑자가 최소 GDP의 2% 이상 될 것으로 보임.
- o 또한 러시아 국부펀드(the national wealth fund) 역시 누적 총액이 1,250억 달러에 달해, 2020년 확장적 재정지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 2014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매우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왔지만, 민간 소비·투자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2020년 약 19조 5,000억 루블(3,100억 달러) 지출 계획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이는 2019년 지출 예산 대비 약 7% 인상된 계획안임.
- 한편 과거와 비교할 때 대외충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안정되어 있어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됨.
- o 이는 과거 부정적인 대외충격에 의해 발발한 여러 차례의 경기 변동 대응경험을 통해 통화당국의 금융시장 관리·감독 능력 및 위기 시 대응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과 국부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정부 재정 여력(buffer)을 확충하였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8년 이후 유가와 환율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외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임(그림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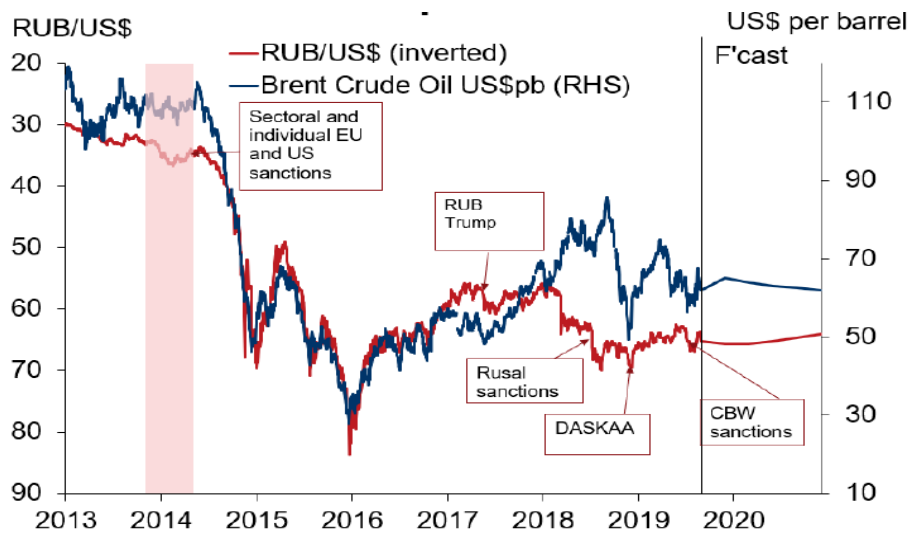
■ [단기: 위험요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가격 급락 이외에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둘러싼 여러 위험요인이 존재함.

- 2019년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투자 진작이 미미하였다는 점과 정부지출 확대를 용인하지 않는 보수적인 정치적 분위기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예산부담으로 인해 충수요 진작이라는 단기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o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용인하지 않는 보수적 입장이 견재하고, 정부예산을 둘러싼 불투명한 행정.

최근 정부예산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최근 모스크바 시의회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정부 지출의 획기적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만연한 부정부패, 광활한 국토 면적 및 행정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에 있어 재정정책의 경기 활성화 효과인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는 1보다 훨씬 낮은 -0.75에서 0.2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됨.¹²⁾
-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예산 심의, 의결 등)로 시차(time lag)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효과는 빨라도 2020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

그림 8. 러시아 환율과 국제유가의 디커플링



자료: Oxford Economics(2019. 9. 30), "Country Economic Forecast Russia."

■ [중·장기: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및 투자 촉진] 러시아 정부는 민간 소비·투자 둔화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음.

-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동반 둔화는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으로 인해 각각의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고리(negative spiral)를 끊기 위해 공급 측면(supply side)에서 구조적인 투자촉진 방안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됨.
 - 민간투자 둔화 → 생산성 하락 → 실질임금 하락 → 민간소비 둔화 → 투자수익률 하락 → 민간투자 둔화
- 이를 위해 투자와 관련한 세제 개편 및 인프라 확충,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투자 촉진을 꾀하고 있음(표 2 참고).
 - [노동생산성 제고] 노동소득 및 소비와 관련하여 간접세 비중을 늘리고 직접세 비중을 낮춤으로써 조세효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왜곡을 완화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투자 및 수출 지원책 마련] 수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투자 및 수출 관련 세제를 완화하고, 투자 및 수출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투자 및 수출경쟁력 확대를 꾀함.

12) Vlasov, S. and E. Deryugina(2018), "Fiscal Multiplier in Russia," CBR Working Paper.

- [중소기업(SME) 지원 및 지하경제 양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 행정비용을 낮춤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자 함.

표 2. 러시아 국가발전 목표 및 중·장기 과제

중장기 목표: 세계 5대 경제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 • 실질소득 향상으로 빈곤 감소 ↗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 지속</p>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 지속방안(공급 측면)		
투자 촉진을 위한(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25% 목표) 효율적 세제 및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 및 지속 가능한 예산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소득세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노동소득 관련 직접세 경감 및 간접세 확대를 통한 노동시정 왜곡 시정) • 부가가치세(간접세) 18% → 20%로 인상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불시스템 확립 • 국부펀드 자금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지난 몇 년간 도입된 예산법안의 체계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수출 촉진 세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수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세제 도입 및 기존 세제 완화: 수출기업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 법인투자세 공제, 경제특구 보험료 인하 등 • 안정적인 연금제도 구축으로 기업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생산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석유산업 의존도 완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24년간 인프라 개발예산 3.5조 루블 • 원유 판매 소득에 대한 세금 추가 도입 • 2019년부터 5년간 균일한 에너지세 부과(목적: 정유부문 현대화 및 고품질 석유 생산, EAEU 단일 에너지시장으로 전환)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및 지하경제 양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재정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세금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의 이윤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 기업의 지불 유예기간 조정을 통한 공식시장으로의 진출 유도 • 전자문서 사용 장려 • 세제 행정 효율화: 세금시스템 간소화 및 소득세 온라인 처리 등

자료: Минфин России(2018),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1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0 и 2021 годов" pp. 25-32; Минфин России(2019),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2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1 и 2022 годов," pp. 30-3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장기: 항목별 지출 계획] 러시아 정부는 상술한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30억 루블에 달하는 정부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 세계 5대 경제 대국진입을 위해 생산성의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2019~24년까지 △ 산업발전 △인적자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 ‘산업발전’은 산업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마지막으로 ‘인프라 확충’은 주거·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음(상세한 정책목표는 부록 표 참고).
- 예산지출 비중은 ‘인적자본’, ‘인프라 확충’, ‘산업발전’ 순으로,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에 비해 고급인력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인구구조(demographics)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러시아 정부가 큰 힘을 쏟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디지털 부문에서 러시아 경제가 갖는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처리와 관련한 모든 법령 및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해 ‘디지털 경제’라는 세부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현재 지출 수준의 3배를 지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표 3 참고).

표 3. 러시아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항목별 지출 계획

(단위: 십억 루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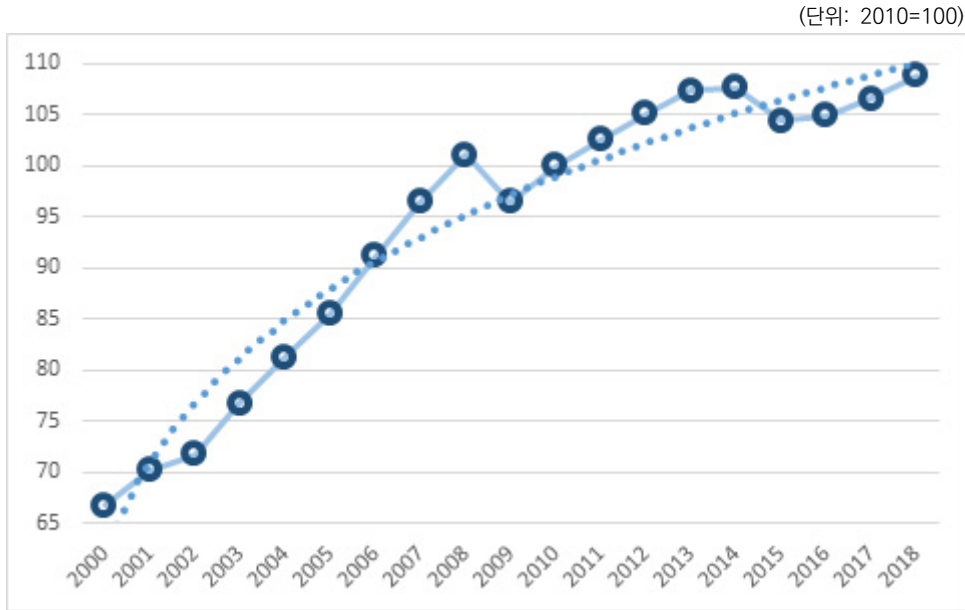
구분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24	비중 (%)
1. 산업발전	디지털 경제	108.0	124.2	177.9	258.0	233.4	198.6	1,100.1	8.2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7.1	6.9	6.9	7.5	7.8	8.2	44.4	0.3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지원	60.6	38.5	51.3	95.4	93.6	74.9	414.4	3.1
	국제협력 및 수출	86.2	86.2	74.5	219.4	206.7	177.8	888.6	6.6
2. 인적자본	인구	525.9	525.9	616.0	588.3	463.9	434.3	3,263.2	24.2
	보건	160.3	160.3	299.7	253.5	210.4	207.4	1,371.4	10.2
	교육	108.0	125.9	134.7	119.2	118.0	122.3	728.2	5.4
	과학	37.0	37.0	47.4	96.1	97.9	91.4	439.6	3.3
3. 인프라 확충	주택 및 도시환경	105.3	105.2	108.4	189.1	193.1	190.0	891.1	6.6
	문화	14.2	14.7	17.8	20.8	21.9	20.4	109.8	0.8
	양질의 도로	129.7	129.7	104.3	23.9	23.2	22.4	440.9	3.3
	환경	56.9	88.0	123.0	146.2	152.1	123.4	689.7	5.1
	현대화 종합계획 및 교통인프라 개발	378.3	378.3	337.2	675.4	692.3	610.5	3,085.5	22.9
합계	1,777.6	1,982.7	2,217.8	2,692.9	2,514.3	2,284.7	13,466.9	100.0	

자료: Минфин России (2019),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20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1 и 2022 годов," pp. 10-11.

4. 시사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가격 급락 및 러시아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상존하는 여러 위험요인과 중·장기 대응책의 현실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2020년 상반기에 민간 소비·투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민간 소비·투자 진작이 미미하였다는 점과 정부지출 확대를 용인하지 않는 보수적인 정치적 분위기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예산부담으로 인해 총수요 진작이라는 단기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연한 부정부패, 광활한 국토 면적 및 행정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에 있어 재정정책의 경기 활성화 효과인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가 1보다 훨씬 낮은 데다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예산 심의, 의결 등)로 시차(time lag)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세계 경기둔화의 지속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와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하락할 경우 순수출이 감소하여 성장률에 더욱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부예산에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지출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정부지출안은 우랄산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일 경우를 가정하고 입안되므로, 배럴당 40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지출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0년 3월 10일 기준 우랄산 유가는 배럴당 약 50달러 수준임).
- 상술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2019~24년 지출 계획을 통해 볼 때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 디지털 산업 발전 및 인적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한·러 디지털 협력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의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위해 생산성의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2019~24년까지 △ 산업발전 △인적자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 '산업발전'은 산업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마지막으로 '인프라 확충'은 주거·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예산지출 비중은 '인적자본', '인프라 확충', '산업발전' 순으로,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에 비해 고급인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인구구조(demographics)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러시아 정부가 큰 힘을 쏟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디지털 부문에서 러시아 경제가 갖는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처리와 관련한 모든 법령 및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해 세부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현재 지출 수준의 3배를 지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KIEP**

부록 그림. 러시아 노동생산성 성장 추이



주: 파란색 실선은 단위 노동 시간당 생산(GDP per hours worked)을 의미하며, 파란색 점선은 2차 다항 회귀선을 나타냄.
자료: IMF(검색일: 2020. 2. 20).

부록 표. 러시아 연방 지출 우선순위

1. 산업발전	디지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전문인력 부족, 비효율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용이 지속되고 있음.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및 인력은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 동시에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디지털 인프라 기능의 안정성과 보안이 보장되어야 함. • 목표: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지출 3배 확대 • 조치: (1) 디지털 경제 규제시스템 구축 (2) 데이터 전송, 처리 및 저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자체 인프라구축 (3)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전문인력 훈련 (4) 개인, 사업 및 국가적 이익 보호를 보장하는 데이터의 전송, 처리 및 저장을 위한 보안기술 개발, (5) 종단 간(end-to-end) 디지털 기술 생성 (6) 공공행정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솔루션 도입 (7) 경제·사회 영역의 우선 부문 전환 (8)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솔루션의 개발 및 구현을 위한 통합 파이낸싱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 (9)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조정된 디지털 경제 발전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 개발 및 이행
	노동생산성과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잠재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 요소임. 또한 현재 러시아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임. 이를 노동의 재분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자 함. 혁신적인 잠재력 확대, 생산 자본 강화, 고급 기술 채용, 직원의 관리 역량 및 자격 향상과 같은 기업의 내부자원을 증대하고자 함. • 목표: 연간 5%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총 일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 조치: (1) 기업 생산성 제고 (2)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 및 규제 장벽(비용) 감축 (3) 지역 및 기업의 관리 교육 (4) 국제협력 (5) 지역 프로그램 고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방법 도입 (7) 신시장 진출, 디지털 혁신 시범 사업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업 지원방안 도입

	<p>SME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동인이며, 그 중심에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과 소규모 기술기업이 자리하고 있음. 러시아 중소기업의 성장에 방해요인은 다음과 같음: (1)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2) 낮은 기업가 참여율 • 목표: SME 종사자 수 2,500만 명으로 확대 • 조치: (1) 금전등록기 사용 기업의 세금 보고 간소화 (2) 중소기업의 생산·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생성 (3) 중소기업의 조달시스템 개선 (4)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제고 (5)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6) 중소기업 수출업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현대화 (7) 농민 지원시스템 구축 및 농촌 협력 확대 (8) 자영업자에 유리한 세금제도 도입
	<p>국제협력과 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도 흑자를 기록함. 그러나 러시아 수출구조는 단편적이며, 60% 이상이 에너지로 구성됨. 현재 국제시스템하에서 국내시장을 적절히 보호하거나 러시아 제품의 해외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함. 수출의 일부 상품에 대한 집중은 자국 통화의 환율에 변동성을 확대하며, 외부충격에 대한 국내 거시경제변수의 의존도를 높임. • 목표: 국내 총생산량의 20% 수출, EAEU 무역액 1.5배 확대, 투자액 1.5배 확대 • 조치: (1)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 농업 및 무역 정책 추구 (2) 국제무역 행정 절차 및 장벽 축소 (3) 2021년까지 '하나의 창' 원칙에 따라 무역 주체와 규제당국 간 협력 추진 (4) 2021년까지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고안 (5) 철도, 도로 및 해상 운송을 통한 상품수출 제한 철폐 (6) 러시아 수출의 현대화를 위한 통합된 수출진흥 시스템 구축 (7)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에 대한 공동시장 형성 완료
	<p>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1990년대 불리한 인구 상황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출생률 증가가 더뎠으며, 현재 사망률 감소가 자연인구 증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 • 목표: 출산율 1.7까지 증대, 체계적인 체육활동 참여 시민 비율 55%로 확대 • 조치: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메커니즘 도입 (2) 여성 고용 촉진 -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 교육서비스 제공 (3)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4)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 (5) 모든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p>2. 인적 자본</p>	<p>보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지난 10년간 국민 기본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농촌지역과 소외지역에서 일차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적 문제가 잔존. 어린이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인프라가 부재하며, 진단 수준이 낮고 감지가 늦어 종양학,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음. 의료기관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러시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분야 디지털 서비스 도입에 뒤떨어져 있음. • 목표: 사망률 감소 • 조치: (1) 일차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성 (2) 국가 의학연구소의 네트워크 형성 (3) 혁신적인 의료기술 도입 (4) 의료기관 내 건강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 확보 (5) 임상 지침 및 치료 프로토콜 구현 (6) 압, 심혈관 질환 및 아동 건강관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 (7) 환자의 권리보호 시스템 형성 (8) 의료서비스의 수출 메커니즘 개선
	<p>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음. • 목표: 교육 경쟁력을 가진 세계 10대 국가,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서 러시아 대학 진입 • 조치: (1) 새로운 훈련 및 교육 방법과 기술 도입 (2)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시스템 구축 (3) 3세 미만 아동의 조기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 (4) 현대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5) 멘토링 도입, 공공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

		트 지원을 위한 조건 형성 (6) 50% 이상의 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시스템 도입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문화 및 여가 시설 부족은 개인의 정책에 영향을 미침. 문화시설의 확충은 도덕적, 정신적 가치 발전 및 지역 개발에 기여함. • 목표: 연구개발 분야 세계 4대 국가 진입 • 조치: (1)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고급 인프라 구축 (2) 연구개발 설비 50% 현대화 (3)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센터 설립 (4) 다양한 분야 기관간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 및 교육 센터 15개 이상 설립 (5) 과학자 및 과학교육 인력 훈련을 양성하는 전문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러시아의 과학·교육 잠재력이 매우 큼에도 최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있음. 혁신에 대한 경제·사회의 거부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상용화를 방해함(GDP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하며, 전체 상품 수출에서 러시아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은 약 0.4%). • 목표: 문화 활동 활성화 • 조치: (1) 러시아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가치에 기초한 러시아 시민의 정체성 강화 (2) 문화, 교육 및 박물관 단지 조성 (3) 뮤지컬 예술 분야에서 유능한 청소년의 발굴 (4) 문화인력 양성 (5) 러시아 국민의 문화유산 보존을 포함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인프라 확충	주택 및 도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주택 부족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및 낡은 주거용 건물과 부적합한 주택은 러시아의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열악한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출을 조장하여 지역 개발 가능성을 제약함. • 목표: 연간 1억 2000만 m² 주택 건설, 도시환경 개선 • 조치: (1) 주택건설 자금조달 메커니즘 개선 (2) 건설산업 현대화 및 주택건설 질의 향상 (3) 주택담보대출의 접근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 (4) 편인한 도시환경, 도시 통합 개발 및 주민 정착을 위한 메커니즘 고안 (5) 부적절한 주택으로부터 시민이 재정착하기 위한 메커니즘 형성
	양질의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지역 도로의 절반 이상이 기준에 미달하며,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고 지역 간 연결을 방해하고 있음. • 목표: 지역 도로 추가 건설, 2017년 대비 교통사고 수 1/2 감축, 사망률 3.5배 감소 • 조치: (1) 기술표준을 준수하는 도로 공사 (2)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3) 모든 도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4) 교통 시스템 자동화 및 로봇 기술 도입 (5) 교통 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확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이환율과 사망률 증가의 주요인임.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무단 매립지는 사회적 긴장을 확대함. 이러한 문제는 인간 발전의 가능성을 줄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함. • 목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 조치: (1) 고품 도시 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형성 (2) 매장이 금지된 폐기물의 재활용 환경 조성 (3) 승인되지 않은 매립지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시스템 운영 (4) I, II 등급의 위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가장 위험한 물체를 제거하는 현대적 인프라 구축 (5)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행동계획 이행 (6)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에 환경 규제 시스템 사용 (7) 첨단 수처리기술을 급수시스템에 이용해 식수의 질 향상 (8) 오염된 수역의 재활 (9) 일부 고유한 수역 보존 (10)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

<p>현대화 종합계획 및 교통인프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러시아는 도로 품질에서 114위, 철도 및 항만 인프라에서 각각 23위, 66위 등 인프라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74위를 차지함. 러시아의 백만 명당 고속 화선의 길이는 5km인 데 반해, 독일은 38km, 중국은 16km, 터키는 9km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이유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힘들고 PPP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임. • 목표: 철도, 공항, 도로, 해상 및 하천 인프라 구축, 저렴한 전기 공급 • 조치: (1) 국제 운송로 '유럽-중국 서부'와 관련된 러시아 도로구간 건설 및 현대화, (2) 러시아 연방 항구의 물동량 증가, (3) 북해 항로 개발, (4) 러시아 지역 주요 도시 간 교통통신의 단계적 발전, (5) 지역 공항 인프라의 재건 및 지역간 일반 여객항공 노선 네트워크 확장 (6) 대도시 사이의 고속 및 고속철도 연결망 기초 확립, (7) "서-동" 및 "북-남" 운송회랑의 전력화, (8)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 개발
<p>연금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구통계 추세를 살펴볼 때 연금시스템 개혁이 없으면 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노령보험연금의 규모와 직원의 월평균 급여 및 연금 감가상각비의 비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음. • 목표: 연금수령자 실질소득 감소 방지 • (1) 연금 지급 수준의 점진적인 증가(2024년까지 2만 루블 달성) • 현대 인구통계학적 조건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연금시스템 수령 시점 조정(남성은 1년에 1년씩 65세까지 연장, 여성은 1년에 1년씩 6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1959년생 남성과 1964년생 여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을 목표). 향후 2년 동안 구법령에 따라 은퇴한 시민은 퇴직 시점보다 6개월 앞서 연금을 신청할 권리를 가짐 (2) 개인의 연금계획에 따라 추가연금기금 형성 (3) 조기퇴직 연금제도 개선 (4) 연금제도 효율화를 위한 연금에 대한 노동자 및 기업가 인센티브 체계 개선

자료: Минфин России(2018),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19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0 и 2021 годов" pp. 33-4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